



플랜트 유관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개선

이 용 표 / 대림산업(주)
yplee@daelim.co.kr

1. 서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허브)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지난 5월 1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1개 경제권(국가 및 지역)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의 순위 하락인 9단계나 추락하여 38위에 그쳤다. 아시아 지역 경쟁국가인 일본 17위(4단계 상승), 대만 18위(7단계 하락), 중국 19위(12단계 상승), 말레이시아 23위(5단계 상승), 인도 29위(10단계 상승) 및 태국 32위(5단계 하락)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다. 이는 국내 기업경영 환경 여건이 개발도상국보다도 열악한 상황에서 기인된 것이다.

IMD는 매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할 때 경영운영성과(38개), 정부행정효율(61개), 기업경영효율(60개), 발전인프라(79개) 등 4대 분야의 총 238개 평가 항목을 합산해 순위를 선정한다. 이 4대 분야 중 부문별로 보면, 정보행정효율(31위 → 47위), 기업경영효율(30위 → 45위), 공공재정부문(14위 → 27위), 제도적 여건(30위 → 46위), 기업관련법(34위 → 51위) 등 주요부문들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노사관계와 우수한 금융전문가 활용 용이성 항목은 최하위인 61위를 기록했

다. 경영운영성과(43위 → 41위), 발전인프라(23위 → 24위)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회계감사관행(37위 → 58위), 이사회경영감시기능(36위 → 56위)은 하락하였다. 반면,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자세는 13위, 근로시간은 7위로 비교적 강점으로 평가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IMD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사회통합기능 수행 부족, 기업경영을 위협하는 국수주의, 국가재정관리의 문제, 불안정한 환율,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을 꼽았다.

이를 살펴보면, 순위 선정은 산업 통계자료가 60%이고, 해당국가 기업인 설문조사가 30%의 비중을 차지하여 국가의 각종 경제/산업 지표는 그다지 나빠지지 않았지만 기업인들 스스로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경영 체감 온도가 싸늘해졌음을 의미한다.

IMD에 이어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도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06년도 세계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 2004년 17위, 2005년 19위에 이어서 2년 연속 하락인 24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WEF가 우리나라내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의 불안정성, 비능률적인 관료제, 자금조달상의 애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 세제관련 규정 및 세율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가지고서도 신규 사업 진출을 망설이는 것은 국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므로 자체적으로 투명성 강화 노력을 하는 한편, 정부도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지점을 폐쇄하거나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겼으며, 아시아 본사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도 주춤거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탈 한국 현상이다. 이처럼 최근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미래 경제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투자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연구개발 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투자재원 조달측면에서도 내부조달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설비투자패턴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5~10년간의 설비투자가 우리경제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통 산업적 요소와 지식 산업적 요소가 복합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산업인 플랜트 산업으로의 투자 유치로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가 고도의 산업 및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있어 플랜트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과학 기술 및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여 첨단 기술의 접목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체계와 제약이 심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를 진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호의적인 투자 환경 개선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플랜트 산업의 현황

2.1 플랜트 산업의 정의와 업무영역

(1) 플랜트 산업의 정의

현재 일반적으로 통칭되고 있는 플랜트 건설산업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4항에 “산업설비공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용어나 특성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각 부처별 또는 사용자별 편의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플랜트(Plant)라는 용어는 사전적 정의 외에는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된 사례는 없으며, 건설산업 기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서 “산업설비”라는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되고 있다. 즉, 산업설비라는 용어는 저변확대가 미비하여 일반적인 기계류 등과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플랜트라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랜트는 기계적 복합화로 만들어진 중소 또는 대형기계 시설물과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과 기계의 다원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단위공장을 뜻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물리적 구성요소들은 토지, 건물, 구축물, 생산기계, 설비장치, 창고, 사무실, 유틸리티 시설, 연구소, 저장설비, 주차장, 위생·안전·소방시설 등 플랜트의 생산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고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상기 사항을 바탕으로 플랜트 산업의 정의를 내려 보면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설계, 구매조달, 건설공사, 시운전과 이들을 경제적, 기술적 및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목표로 하는 경제성, 성능보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를 완성시키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플랜트 산업의 업무영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플랜트 산업의 업무 영역은 그림 1의 역무 구성과 같다. 대체적으로 사업 기획/조사 및 경제성 분석, 생산공정 기술설계 또는 선정,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 조달, 건설공사, 시운전 및 성능보장 시험, 운전조업 지도, 보수/운영을 부분적으로 또는 일괄



적으로 수행하는 역무로 분류하고 있다.

(3) 플랜트 산업의 위상과 특성

플랜트 산업은 장기간에 걸친 경험없이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후진 개발 도상국들이 아직은 쉽게 따라 올 수 없는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자본 축적이 전혀 안되었었고, 게다가 기술이나 에너지 자원도 없었으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산업화에 성공을 거두며 1970년대에 성장 궤도에 안착하였다. 지난 30년 동안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완전히 변신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업적을 달성하여 플랜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플랜트 산업 초기에는 건설을 제외한 전 과정을 해외에 의존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분야에 참여하게 되어 기술 습득을 하고 제조회사도 점차 국산화의 비율을 높이게 되었다. 이로써, 각종 플랜트 설계 능력과 각종 기기의 제조 능력 배양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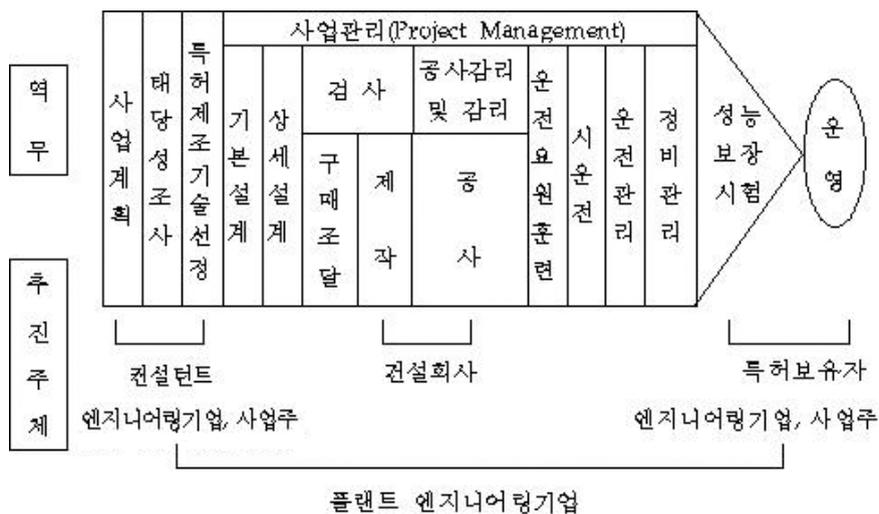
하지는 못하지만 국내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져 해외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

1970~198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석유화학공장, 제철소, 조선소 등의 풍부한 국내 플랜트건설 시공 경험과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국산 기자재를 공급할 만큼 성장한 세계 굴지의 중공업 업체,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종합 상사의 뛰어난 해외정보력이 30여년 동안 발전해오면서 국내 플랜트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더욱 다행스러웠던 것은 70년대 초 중동 특수로부터 플랜트 사업 기술을 배운 경력자를 많이 보유하게 되어 선진 몇몇 나라를 제외한 전세계의 국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면서 90년대 말까지는 이 분야에서 큰 국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기업, 학계 및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플랜트 산업의 발전 과정과 전망

(1) 국내 플랜트 산업의 발전 과정

국내 기술용역업의 시발점인 플랜트 산업은



[그림 1] 플랜트건설 역무 구성



1955년 엔지니어링 설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 정부 주도의 기술용역 업체인 코리아퍼시픽컨설턴트사(1963년)와 코리아엔지니어링유한회사(KECL.1970. 1. 20)가 뒤이어 설립되었다. 한국기술용역주식회사와 미국의 러머스사와의 합작으로 3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것이 코리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이다. 코리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는 울산의 정유공장 확장 공사를 맡았으며, 공사를 끝낸 1973년 러머스사는 그 소유 지분을 일본의 도요엔지니어링사에 매각한 후 철수하였고, 1978년 국내회사 지분을 삼성이 인수하였다. 1971년 4월에는 우리나라 플랜트 수출의 효시가 된 (주)승리기계의 대 파키스탄 인조 직물 플랜트(견직물 제조 설비 수출, 수출액은 105만 1,000달러)가 플랜트 수출 1호를 기록하였다. 이어 1973년 기술용역관련 기술 집약 및 복합기술 창출을 위한 기술용역육성법의 제정 이후 여타 세법과 중소기업진흥법, 예산회계법 등에 기술용역업에 관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미진하게나마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후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중화학공업화에 박차를 가하여 본격적으로 플랜트 건설실적을 축적하게 되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중동 특수와 함께 연간 7,8억 달러의 플랜트 수출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가치와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 국내 재벌 건설회사들이 자회사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설립하여 10여개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1974. 2. 11), 대림엔지니어링(1974. 7. 3), 동아엔지니어링(1974), 대우엔지니어링(1976. 10), LG엔지니어링(1978. 10)을 들 수 있으며, 그 외 신화건설, SK건설(1984.8 엔지니어링 부서 신설)등이 기술용역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관련 산업 발전을 주도하여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산업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 선보인 초기의 엔지

니어링은 플랜트 건설을 위하여 외국 기술회사와 공동 또는 하청의 형태로 상세 설계 위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이었다. 정부의 정책도 변화를 거듭하여, 1976년과 1981년 두 차례 기술용역육성법을 개정하였으며,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기술용역육성 방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동 특수가 사라지면서 플랜트 수출도 급격히 위축되어 연간 4,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해외에서의 기술 도입을 적극 시도하여 실적을 쌓고 중동 이외의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면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건설 업체 또는 해외 업체와 제휴하여 시장 확대를 넓혀 나가는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의 성장기를 거친 후 1990년대 들어서서는 설계 위주에서 탈피하여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건설(Construction)이 통합된 EPC Turn Key 사업 추진업체로 변신하면서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국내 플랜트업체가 발전설비, 화학설비, 해양설비 등에 경험과 실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국제경쟁에 뛰어들어 든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5%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플랜트 수출국으로 성장하면서 한때는 연간 100억불 가까운 수주 실적을 올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국업체간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의 반복과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위험관리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로 각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1997년의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모기업에서 독립하여 존속하는 회사와 모기업인 건설회사에 합병되어 플랜트 역무를 수행하는 회사, 그리고 폐업이라는 불행한 사태에 이른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 모든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업계는 인력, 해외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소위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업계의 끊임없는 기



수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플랜트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밀받침할 국내 플랜트 시장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였다.

마침, 국내 화학기업들은 2004년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화학제품 가격 급등과 중국수요 호조에 따른 양호한 경영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 폭등이 곧바로 석유화학제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매출액이 대폭 증가함은 물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유사 이래 최대의 기록을 세워 전체 화학기업 경영실적 호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된다. 이를 기반으로 2001년부터 시작한 NCC 증설 사업이 수 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PP, LLDPE, BTX, BRU, BD, PC, MMA, SM, EO/EG 등 DOWN STREAM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있다. 정유사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투자 규모가 1조원 안팎에 이르며,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고도화 설비 건설에 이미 년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앞 다투어 참여하여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고도화 설비란 저가의 고유황 벵커C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 등 경질 석유제품, 초저유황 벵커C유 등으로 정제하는 시설이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특히 그 가치를 발휘하는 고부가가치 설비 휘발유를 주로 생산하는 유동상 촉매분해공정(FCC)과 등/경유를 주로 생산하는 수소첨가분해공정(HOU)으로 나뉜다. 이외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복합발전소 건설과 LNG 탱크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적어도 2010년까지 수조원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기대 되고 있다.

(2) 플랜트 산업의 전망

세계 E&C(Engineering & Construction) 시장이 중국과 중동 화학기업들의 신증설 열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E&C 시장은 2004년부터 특수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2010년까지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세계석유화학 시장이 2010년경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세계석유화학제품의 수급동향>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에틸렌계 유도제품 수요는 연평균 4.3% 신장하여 2004년에 비해 2,970만 톤 증가한 1억 3,400만 톤에 달하나 잇따른 신증설 프로젝트로 생산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필렌계 유도제품 수요는 연평균 4.5% 신장해 2004년 6,160만 톤에서 2010년 8,03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플랜트 관련 분야 설비 확대의 영향은 곧바로 우리나라에게는 해외 플랜트 수주로 이어져 9월 현재 209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거둬들여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수주시장인 중동이 81억 달러로 74% 증가했을 뿐 아니라 오일 메이저들의 해양 플랜트 수요 증가로 유럽이 44억 달러, 미주가 35억 달러에 이른다. 설비로는 해양유전이 100억 달러, 석유화학이 41억 달러, 발전/담수가 21억 달러이다. 해외 플랜트 수주의 확대는 세계 플랜트시장의 호황과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크며,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연관 부문들의 후속 수출로 이어지는 만큼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확고한 경쟁 체제 구축이 기대 되고 있다.

2.3 국내외 플랜트 산업의 환경

21세기 과학기술 및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플랜트가 창출되고 소규모 다기능·복합기능을 가지는 환경 등 복합플랜트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내 플랜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의 관장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업역 및 분류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기술기반과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하고 지식 집약화가 미흡하다. 나아가 엔지니어링진흥법상의 건설부문 전문분야의 분류나 자격제도 등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및 핵심기술과 최적설계 및 성능확보기술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은 개도국들의 플랜트 공사가 대부분 BOT(Build Operate Trasfer)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개도국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이 매우 힘들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리스크 측면에서 환율, 금리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완공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플랜트 사업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플랜트 분야의 기반기술, 제조설비, 인적자원, 가격경쟁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는 세계 플랜트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보유한 상태이다. 플랜트 산업의 기술수준을 비교하면, 미국은 여전히 최선진국의 위치에 있으며,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은 후발국으로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지만 건설·토목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열세이다.

이러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보다 치열해져 수주활동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선진 업체의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함으로써 새로운 달러박스로 재도약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제도 현황

3.1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투자국을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소는 물론,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의 전파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투자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개도국

은 물론 선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제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개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노력은 국제자본 흐름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개도국에 대한 국제자본 유입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5.3%에서 1998년에는 무려 56.4%를 차지하였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국민경제에서도 기여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자본과 시설뿐만 아니라 선진기술과 경영기술 등 장래 국가경제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져오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아울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경쟁력의 향상도 가능하다.

(2)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제적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국가경쟁력의 제고, 기술개발 촉진 및 경제 활성화의 도모, 자산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 해소 및 고용창출로 실업난을 해소한다. 따라서 위축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외국기업 유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유치로 상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 경제적으로는 기술, 경쟁, 전후방 연계 등을 통해 생산성제고 효과를 가져와, 그 결과 수출증진, 투자촉진, 생산증대를 유발하며 거시 경제적으로는 외국자본유입으로 외환이 증대되며, 국내투자자와 자본형성이 증가하여 생산과 고용 증진을 가져온다.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증대시키지만 국내의 경우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3.2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정부가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2003년



65억 달러에서 2004년 128억 달러로 증가했었으나 2005년 116억 달러, 2006년은 9월 현재 75억 달러로써 연말까지 110~11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2005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에 2002년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추이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외국인 직접투자가 하향 추세로 돌아선 것은 한국의 투자 여건이 경쟁국들에 비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직접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근의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경기 침체 및 정세불안이다. 전세계적 경기 침체의 지속과 정세불안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0년 3.9%에서 2001년에는 1.1%, 2002년에는 1.7%로써 2년 연속 1%대에 그쳤다.

세계 경제 동향 못지않게 최근 수년간의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 유인책 부족과 관련 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제발전 초기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세감면, 규제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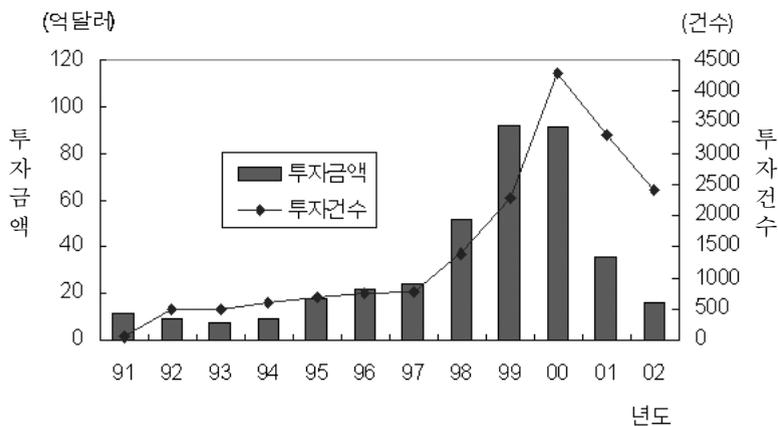
등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왔다. 최근에 들어 상하이도 푸동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 특구에 무역, 금융 등을 집적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많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기업여건이 열악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생활의 질 등 투자환경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열세에 처해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매일경제신문에서 최근 20개 외국 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한국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데서도 알 수 있다.

넷째, 매력적인 투자처가 부족하다. 경쟁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고전하는 국내기업이 외국인들의 주요 투자 대상이었는데 외환위기에선 탈출하고 긴박한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결과이다.

3.3 투자 유치 제도

(1)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의 변천



[그림 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추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몇 년이 지나 외환 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현시점에서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국내의 첫 외국인 직접투자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차관 중심의 외자 도입 추진기 (1962~1983)
- 나. 기반조성단계(1984~1989)
- 다. 단계적 개방 단계(1990~1995)
- 라. 투자규범의 국제화 단계(1996~1997)
- 마. 투자촉진·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 단계(1998~현재)

(2) 경쟁국 제도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규모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아시아 경쟁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주로 우리나라의 낮은 국제화 수준, 낙후된 금융 부문, 그리고 정부의 비효율성과 규제 잔존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아시아 경쟁국간에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속에서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개선 이외에 각종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투자기회 확충 등을 통해 아시아 경쟁국보다 더 나은 투자여건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사후관리 즉, 외투기업 고충처리(Aftercare) 시스템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구개발등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 확대, 인프라 스트럭처 확충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등 조세관련 투자인센티브를 보다 다양화하고, 외국인 투자 지역 활성화 등 기존 정책 운용의 효용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 유치는 어느 한두 제도의 우수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제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쟁국들은 국가마다 차별적인 투자인센티브를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강력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싱가포르의 낮은 세율과 조세감면, 노사안정 및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 영국은 강력하고 신축적인 보조금 제도 운영을 통해 각각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 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4.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방안

4.1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시각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나아졌다.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었고 토지 시장도 개방되었으며 인수합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도적 장애요인들이 외국인 투자 회사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이제는 외국회사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면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재확인과 투자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할 곳을 찾는 외국기업들의 요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4.2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개선방안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수출도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경기 회복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외환 위기 발생 직후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의 회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바를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가 투자 입지로서 매



력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 위주의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체감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한 우리 정부도 늦은 감은 있으나 투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직접 겪었거나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전되는 경우 생산, 소득, 고용위축과 이에 따른 지방경제의 타격 등으로 2007년 이내에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는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는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 집중도로 전반적인 플랜트 분야에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기계산업은 물론 설계, 시공, 감리, 시운전 등 종합적인 시스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업 공동화 방지는 물론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회사 유치의 촉진은 플랜트 유관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확고한 발판이 될 것이며 그 전제 조건으로써 국내의 투자 환경은 지금 보다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가 국내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기업 및

관련 계열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국내에서 확보한 이윤을 송금해주어 국내투자 여력을 축소하기도 하고 기술이전 시 핵심기술은 모국에서 수행하며 철저히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다.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무역 수지를 악화시켜 국민경제의 성장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내시장 진출시 인수합병을 통하여 독과점 체제의 기반을 다지거나, 진입 후 경쟁 기업을 구축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경쟁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반대의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고용·임금에서 저임금의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조업에서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경기 회복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자 도입은 1962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긴 했으나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노사관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착 시켜야 한다. 노사 관계의 유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집행
- 파견 근로제, 정리해고제에 대한 탄력적 적용 보장
-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형평성 유지
- 합법적 구조 조정의 보장
- 옴부즈맨 사무소 내 노무전담반 설치 및 전담 요원 확충
- 엄정하고 신속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 집행함으로써 외국기업의 불안감을 해소

둘째, 조세 지원 제도의 보완이다.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앞 다투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유럽 연합(EU) 가입을 앞두고 외자 유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특히 동남아의 경쟁국들 보다 높은 현재의 각종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 시켜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상 조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외투기업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감면
- 신규사업 또는 산업 고도화에 영향이 큰 사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면제 기한을 연장
- 외투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세액 감면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셋째, 과도한 정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개선될 시에는 신규 투자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듯 외투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거부감을 없애고 투자 의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추진이 필요하다.

- 공장입지 관련 규제의 완화
-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화, 명료화
- 물류산업관련 규제의 완화로 제조업 지원 서비스 발전 도모
- 외투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주식취득 및 양도, 업종 제한 등의 규제 완화
- 내수산업, 정부규제 산업, 조달시장 등을 과감하게 개방
- 정책목표를 미리 설정한 후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성과 위주 개혁을 추진

넷째, 산업입주 단지의 저렴하고 장기적인 분양·임대를 보장한다. 국내 공단의 평균 분양가는 149달러/m² 로서 중국의 35달러/m² 에 비해 4배 이상이며 산업단지 입주 시 부대비용은 한국이 분양가의 10%인데 반하여 영국은 1%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외자유치 정책을 지역발전 정

책으로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면 세수 증대 효과 등 지역 발전의 파급 효과도 더불어 도모할 수 있는 다음의 개선안을 적극 실현토록 한다.

-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 장기 미분양 산업 단지의 활용방안 모색
- 부지 임대기간을 현 10~50년에서 보다 장기화 필요
- ‘경제 자유 구역’의 확대 및 교육 의료 등 기초 시설 확보
- 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함

다섯째, 성숙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생활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한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면서도 외국인만 특정 지역에 따로 모아 놓을 경우 한국인들의 배타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윌리엄 오벌린 아캠 회장은 “외국인들은 ‘게토(ghetto · 집단 거주지역)’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접촉 할 기회가 많아져야 서로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달을 할 만큼 우리사회의 배타성이 외투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대외 개방의 확대로 한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 개방적 국민 의식을 높이며 적어도 다음과 같이 환경개선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외국인 생활 안내 센터’를 개선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보장
- 외국인 전용 학교 확대 및 외국인 교사 확보
- 비자 발급 완화, 이중국적 허용, 최고급 주거 환경 조성
- 유치 후에는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새로운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며, 투자 홍보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5. 결론

투자 유치경쟁에서 우수한 해외 투자기업의 국내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노사관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착 시켜야 한다.

둘째, 조세 지원 제도의 보완이다.

셋째, 과도한 정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넷째, 산업입주 단지의 저렴하고 장기적인 분양·임대를 보장한다.

다섯째, 성숙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상의 5가지 개선안을 주축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신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실 상부한 지원체계의 일원화에 공감하여야 한다.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만 혼란과 불신을 없애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외국기업이 원한다면 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를 줄이거나 도심지에 대형 광고판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정책까지 바꾸는 싱가포르,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공무원이 집·학교·장보기까지 챙기며 치열한 정보 전쟁을 치르는 미국의 미주리 주정부, 자국 종업원 1명을 고용할 때 6~9개월치 봉급을 지원해 주는 영국 등과 같이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일괄서비스의 정착과 민·관 합동으로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여 개선의 현실성과 투자의 희망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야심찬 의지를 반영한 장기, 중단기 및 순차적·세부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KIPCO)